

현장과 시각

광역경제권 재검토해야



정 후식

사회1부 부장

우리가 현실로 나타났... 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인 '5+2 광역 경제권' 얘기가.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일방통행식으로 선정해 반발을 자초하다니 열흘도 지나지 않아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전국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잠미반 지역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광주·전남 주민들에게 '남의 집 잔치'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영남과 호남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호남권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담겼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내놓은 지 8일만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은 '조정적 광역발전'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치장한 채 등장했지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 '지방 죽이기' 정책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다.

구체적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민국에는 서울이 있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살고 있다' '서울공화국' 등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경제권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공룡과 토끼를 같은 울타리에 넣고 뒹박질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도 지켜야 한다. 5대 광역경제권이 동일선상에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지지지역은 수도권이 될 수 밖에 없고, 규제마저 풀면 각 지자체들이 그동안 애써 유치한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유턴해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who@kwangju.co.kr

美 정부 7천억弗 공적자금 요청

의회에 법안 제출...사상 최대 규모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일 향후 2년간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아침(미국 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전달했다.

이 법안이 내주 초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금융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투입할 수 있다.

AP통신이 자체 입수한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미국내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들로부터 올해 9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주택 및 일반상거래용 모기지과 모기지저당증권을 7천억달러 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는다.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은 역경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경매 방식을 취하면 금융회사들은 자체 보유한 부실자산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시, 정부에 팔아야 한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무장관은 인수자산을 운용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부실자산 인수계약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등 폭넓은 권한을 확보한다.

이러한 권한은 법률 시행후 2년간으로 한정된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10조5천150억달러에서 11조3천15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의회 지도부는 이날 정부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빠르게 다음주 중 의회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법안이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의 다수석은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각에서는 이 법안에 증산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주택대출의 상환 연체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보유자들을 지원하는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이슬라마바드 소재 매리어트 호텔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현지 군과 경찰 등은 이날 호텔에 1t 가량의 폭탄을 장착한 트럭이 돌진한 뒤 폭발해 60명이 죽고 70여 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폭탄 테러 60명 숨져 한국인 피해 없어

2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 60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군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슬라마바드 시내에 위치한 매리어트 호텔에 1t 가량의 폭탄을 장착한 트럭이 돌진한 뒤 폭발, 60명이 죽고 70여 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는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駐) 파키스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30여명의 교민들을 모두 접촉해본 결과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번 테러에 적어도 1t 가량의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호텔 연회장 천장이 무너져 내렸으며 창문 수백 개가 깨지고 건물 일부에 화재도 발생해 붕괴 우려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아직 테러 배후를 자처한 테러집단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폭발 당시 호텔에는 페미다 미르 자 국회의장 주재로 라마단 성찬(聖飧)인 '이프타르' 리셉션이 진행중이었던 만큼,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테러반의 테러 일 가능성이 높다.

“北 핵시설 복구 빨라지면 한·미 에너지 지원 중단”

정부 설비 복구 내달로 미뤄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핵시설 복구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영변의 핵연료봉공장, 5MW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면 3개월 핵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면서 “아직은 복구작업의 속도가 느리지만 가속화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1장구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도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당분간 계획된 에너지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소식통은 “지북한의 핵시설 복구 속도가 느리면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지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께 대북 에너지 설비, 자체 미제공분의 절반을 보내려던 계획을 일단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북에 제공키로 합의한 설비·자재의 잔여분인 자동용접강판 1천500톤을 25일께 해로로 1차 배송할 뒤 다음달 중·하순께 나머지 1천500톤을 보낼 계획이었다.

한국,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무장 이슬람 과격 테러조직인 탈레반을 비롯한 해외의 약병들은 테러조직의 연계세력들이 잇따라 국내에 침투, 버젓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에 관한 한 ‘청정지’로 간주했던 한국도 더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인준회 의원에게 제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JI는 인도네시아 자바를 거점으로 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 각종 테러를 자행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서남아국가 출신 3명이 주한미군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강제추출 조치를 당했으며 2006년 11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지하드를 선동한 동남아국가 산업연수생이 적발돼 역시 퇴거조치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20명을 납치, 인질로 잡고 있다가 일부를 살해했던 무장 탈레반과 연계된 세력들이 한국에 침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탈레반과 연계된 아프가니스탄 마약의 밀매범으로 중동국가 출신 요원 4명을 적발한 데 이어 7월에는 역시 탈레반과 연계해 아프간으로 밀수출을 기도한 서남아 국가 출신 5명을 적발했다.

탈레반 세력들이 지난해 한국인 납치시 한국 정부의 대외와 언론보도 등 각종 활동을 개통고 아프간 파견 한국군의 철수를 요청했던 점에 미뤄 탈레반과 연계, 국내에서 활동중인 마약 연계조직들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국제 테러조직 암약 중간 거점지역 활발 최근 5년 74명 적발

한 대외비 ‘최근 5년간 해외테러조직의 국내 잠입 현황·활동 및 검거실적’ 자료는 한국이 해외 테러세력들의 ‘중간 거점’임을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테러 모의와 준비(反美)선동, 주한미군 정보수집, 테러자금 모집, 탈레반과 연계된 마약 원료 밀수출 등에 관련된 해외 테러세력 74명(19건)을 적발, 강제 퇴거 등 조치했다.

국제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와 연계된 혐의자 8명은 주한 외교공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다 2004년 10월 강제퇴거됐다.

Advertisement for Daewoo Law Firm (대중법률) featuring a large table of legal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

Advertisement for Yookseon Korea (옥션코리아) featuring a large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